靑, 위기대응시스템 개편 묵살했다

임시조직 위기상황팀 방치…'금강산 피살' 대통령 보고 늦어져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의 보고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수차례 기존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청와대의 위기정보상황팀은 과거 참여정부에 비해 인원이 크게 감축된 것은 물론 체계적인 보고체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 현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을 몇 차례 제기했으나 쇠고기 정국 등에 밀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건의 내용은 현재의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은 정식 조직이 아니고 임시조직인 만큼 위기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기정보상황팀은 참여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조직으로 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0명 안팎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소속도 대통령 직속에서 대통령실장 산하로 재편되면서 조직 내부의 위상도 낮아진 데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통령에게 직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위기대응 시스템 특성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내부 위상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정보상황팀에서 대통령실장이나 관련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 시간 '대통령 직보'가 이뤄질 수 없는 시간적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 부분도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만 해도 위기정보상황팀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위기정보상황팀은 지난 11일 오전 11시55분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에 "총격 피살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첫 보고를 했다.

이후 11시57분께 합참의 '질병사망설' 보고를 다시 전달한 뒤 관련 기관의 정보를 취합, 낮 12시5분 "총격 피살이 확실하다"는 최종 보고를 했으나 정작 이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오후 1시30분으로 무려 1시간25분 이상 지체됐다.

당초 청와대 측도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건의를 받고 조직개편 때 위기정보상황팀을 정비할 방침이었으나 쇠고기 협상 파문에 이은 촛불 시위 등으로 국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진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신속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는 전 정부에서 체계화한 모든 시스템을 부정해 제대로 된 위기관리를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CCTV 사건 규명 열쇠될까

금강산 관광특구 펜스에 설치 확인

박씨 피격 지점 인근…녹화 가능성

금강산 관광특구 내 해수욕장과 북측 군사지역을 구분짓는 출입금지 펜스에 북측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CCTV에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을 개방한 목적에 대해 '세계의 명승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모두가 와보게 해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표방한 점을 감안하면 북측 감시초소나 인원을 노출시켜 남측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보다는 이 CCTV란 간접적 수단으로 경계선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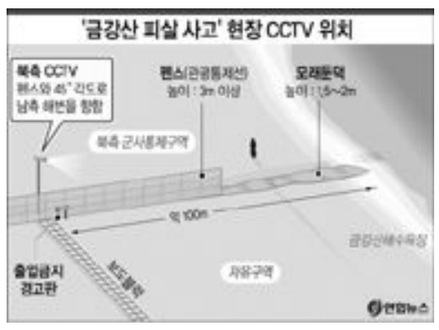
CCTV가 경계감시용 장비로서 가동됐다면 촬영범위는 관광지역인 금강산 해수욕장과 북한 군사지역을 가르는 경계선, 즉 녹색 철제펜스 부근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씨가 해수욕장에서 북측 영내로 넘어가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북측이 밝힌 사건 발생시점은 새벽 4시50분. CCTV로 박씨의 월경 시점을 알 수 있다면 중년 여성의 평균 보행속도를 감안해 북한 초병이 걸어오는 박씨를 최초로 맞닥뜨린 시점과 장소를 추론할 수 있다.

추론된 데이터를 통해 박씨가 시신 발견 지점에서 1㎞나 더 깊숙이 영내로 진입했다가 도망쳤다는 북측 주장의 진위를 가려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피격 예상지점과 소총 유효사정 거리 등을 분석하면 초병이 초소에서 근무수칙에 따라 총을 쐈는지, 초소에서 나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지 우발적으로 격발을 했는지 등의 정황도 짚어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북측이 과잉대응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만한 정황이 발견될 수 있는 만큼 남북간 책임 공방 양상에서 '무게 이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박씨가 평범한 여성 관광객이었다는 점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이 어두웠는지 아니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는지도 촬영된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CCTV가 존재했어도 실제 가동이 안되고 있거나 이번 사건 당시 현장을 포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북한의 태도에 비춰 설령 박씨의 월경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어도 북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CCTV가 최소한 '우리 조사 결과를 믿으라'는 북측의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금강산 北초소서 위협받은 관광객 5월에도 있었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안전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지난 5월에도 우리 관광객 1명이 새벽 시간에 이 곳에서 조깅을 하다 북한군에 30분 가량 억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충북도청 직원인 A(51·5급)씨에 따르면 사무관 교육과정의 하나로 전국의 다른 동료와 함께 지난 5월 19일 금강산을 찾았다 북한 초병의 총기 위협을 받는 등 십년감수 했다는 것.

그가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관광 이틀째인 20일 오전 일찍 일어나 평소 습관대로 조깅을 하기로 하고 혼자 숙소인 금강산호텔을 나섰으나 20여 분 뒤인 새벽 5시 30분께 초병 2명이 "멈춰, 멈춰.."라는 소리와 함께 총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제지를 했다는 것.

이들 병사는 이어 A씨를 초소 부근으로 데려가 별다른 말없이 세워놓았으며 30분 가량 지난 뒤 초소에 있던 다른 병사가 나와 "여기 오지말라. 가라"는 훈계와 함께 그를 보내주었다.

그는 "민간인 중에서는 남측 관광객만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북측의 과잉대응이 분명하다"며 "이유야 어찌됐던 관광객 신변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현대아산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北 억지 성토, 정부 대응 질타

한나라·민주 "진상 조사·재발 방지" 한 목소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4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의 억지 태도 고수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의 늑장 보고 등 위기관리 미흡을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망 통보가 늦어진 점, 피격 당시 상황, 사태 수습 및 진상조사 태도 등이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북측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구나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동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다"면서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무슨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 있는지 그 억지에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북한이 자주 외치는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가 거짓이 아니라면 즉각 진상조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정부 대응 미숙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사건 보고를 받은 지 2시간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위기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도 사태의 진상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이 과잉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우리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은 사리에 안 맞고 잘못됐다. 북한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북측의)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이번 사건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북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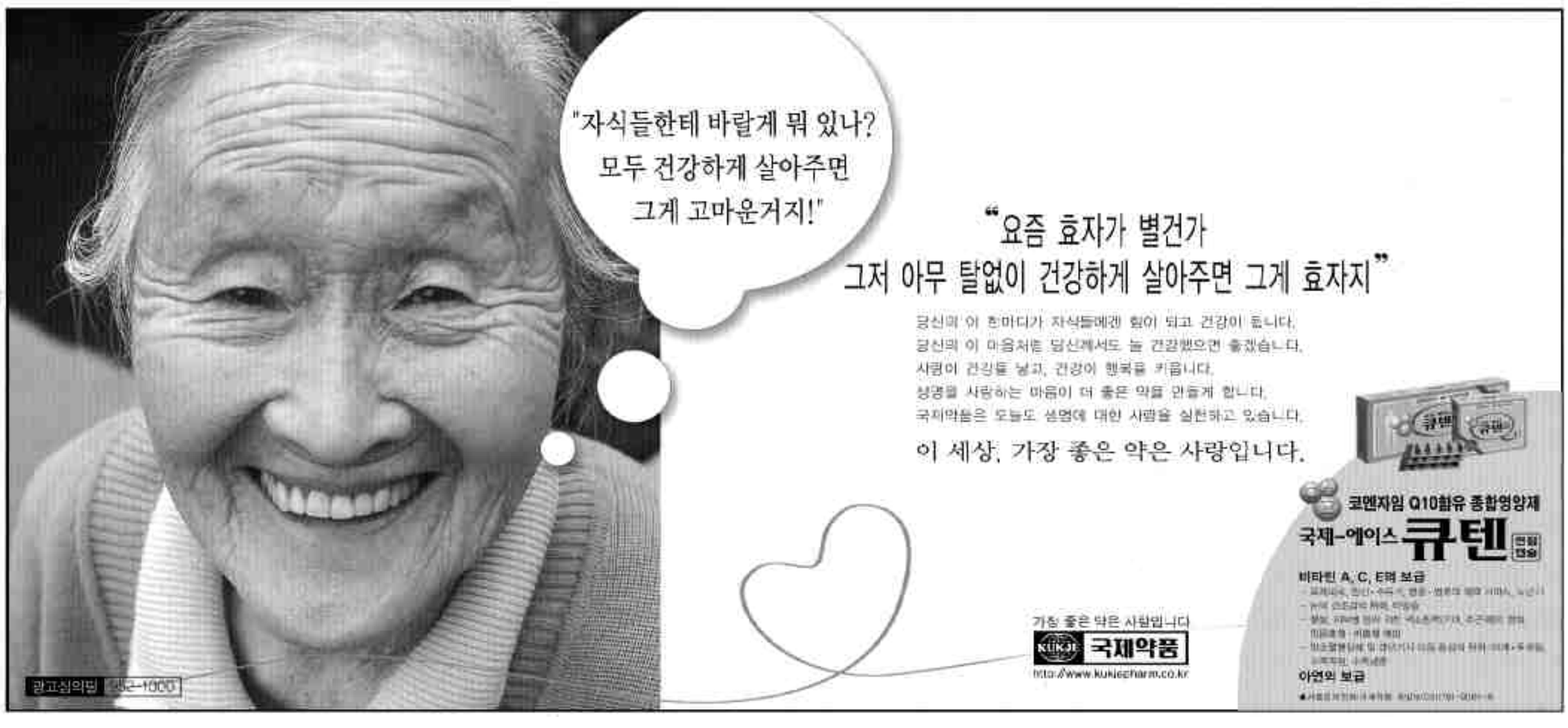
민주당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여당이 적절한 해법을 찾도록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北 총격 유감…남북 대화 해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4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비록 (관광객이) 초소를 넘었다 해도 총격을 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사태가 악화돼선 안되며 남북이 빨리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북한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남북 공히 단절되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기킨 주역 중 한명인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록 관광객이 한계선을 넘었더라도 북한이 과잉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잘못한 게 사실인만큼 우리도 반드시 (북측의 설명과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하고, 북측도 설명하고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